

보 도 자 료

- 제공일 : 2004. 6. 14
- 제공자 : 농림부 소비안전과
- 과 장 : 양 태 선
- 사무관 : 이 재 식
- 전 화 : 500-1739

이 자료는 2004년 6월 15일 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먹거리 위협에 모든 조사·단속권 동원, 강력 대처

- 농림부는 14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허상만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·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의 농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농식품 안전성 강화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회의에서는 하절기 농식품 안전성조사를 강화하는 한편, 안전한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모니터링 강화, 그리고 친환경·안전농산물이 시장에서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었다.
- 우선 조사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, 수의과학검역원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6월부터 8월까지 농식품에 대한 위생·안전 점검과 원산지 위반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.
- 이번 전국일제단속 기간중에는 농약사용증가가 우려되는 콩나물, 고랭지채소 등의 채소류는 주산단지별로 잔류농약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, 닭고기 등 축산물은 도축장 등 축산물작업장을 중심으로 미생물과 항생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.

- 채소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취약생산지 및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오는 6.21부터 8.31까지 실시하고,
- 축산물에 대한 단속은 수의과학검역원과 시·도에서 닭고기는 6.1부터 8.15까지, 학교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은 6.1부터 7.14까지 실시한다.
- 이번 위생안전성 조사에서 적발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여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격리된다.

○ 또한,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·판매하는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원산지특별단속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에 공급되는 농식품, 절임배추·김치 등 최근 수입이 급증되고 있는 품목과 육류에 대해서 실시된다. 학교급식은 6.10부터 30일까지, 김치 등은 7월 한달간, 육류는 8월 한달간 집중 단속된다.
- 특히,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원산지특별추적반을 운영하여 부산, 인천 등 수입항구에서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중점단속한다.
- 이와 같은 원산지 특별단속을 위해 검·경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합동으로 중앙특별단속반 및 대도시지역 원산지 전담반(총502명)이 편성, 운영된다.

□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된다.

○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위주로 하기로 검·경과 협조가 이루어졌다

고 밝혔다.

- 원산지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(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벌금)보다 높이거나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.

□ 아울러, 농림부는 집중 단속 등 사후관리와 더불어 원천적으로 안전한 농식품만이 생산·공급되는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·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

- 농산물은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, '13년까지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40% 감축할 계획이며, 우수농산물관리제도(GAP)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.

- 또한, 농산물 안전성조사 항목을 확대하고, 분석시설을 확충하는 한편, 부적합품 생산출하자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상 불이익을 주어서 부적합품목의 시장출하를 사전예방하기로 했다.

- 생산에서 가공·유통까지 농림부가 일관관리하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,

- 생산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사용감축 유도를 위해 배합사료제조시 혼합가능한 동물약품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30종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. 이에 따라 내성이 강하거나, 잔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항생제의 사용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.

- 한편, 항생물질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. 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기간이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두배나 늘어난다.

□ 한편, 농림부는 농식품 안전관리에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,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○ 원산지 단속 및 축산물 위생 명예감시원을 '04년 4천명에서 '05년까지 5천명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하고,

○ 농식품 안전관리 대책 수립, 각종 농식품 안전성 조사사업 등에 소비자단체의 참여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.

□ 허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하절기 전국일제 집중단속기간 중 벌어질 수 있는 불미스런 사태 예방을 위한 단속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공직자 기강확립도 강조지시하였다.

농식품안전성 강화대책

2004. 6. 14.

농 립 부

차 례

1. 농산물유통국	1
2. 식량생산국	9
3. 축산국	17
4. 농산물품질관리원	27
5. 수의과학검역원	33
6. 농촌진흥청	39
7. 산림청	47
8. 농협중앙회	51

농식품 안전성 강화 대책(개요)

1. 회의 개최 배경

- ☐ “쓰레기 만두 사건”을 계기로 식품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
- ☐ 6.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식품범죄 근절을 지시
 -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, 조사권을 가진 모든 기관이 나서서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지시
- ☐ 농산물과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원산지표시 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부에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

2. 기관별 보고 개요

☐ 보고 내용

- 본부 국은 제도개선 등 농식품 안전정책 방향과 주요 특별 점검 계획을 보고
- 산하기관은 집행부서로써 추진현황 및 당면 추진과제, 점검계획 등 보고
- 양청 및 농협은 농식품안전성 관련 기술개발, 지도·교육 등을 보고

☐ 보고순서

- 농산물유통국 → 식량생산국 → 축산국 → 농산물품질관리원 → 수의과학검역원 → 농촌진흥청 → 산림청 → 농협중앙회

농 산 물 유 통 국

농산물유통국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부적합 농산물을 차단하는 안전성조사 도입하고 농가교육을 꾸준히 실시

○ 안전성조사 : ('99) 29천건 → ('01)55 → ('02)56 → ('03)59

- 농산물 부적합율 : ('99) 1.6% → ('01) 1.1 → ('02) 1.07 → ('03) 1.48

○ 농업인 등 매년 500천여명 안전성 교육 실시

□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,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표시제도 운영

○ 명예감시원·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민관합동 원산지표시 관리

- 원산지 위반자 처벌규정 강화 : 5년이하징역·5천만원이하벌금

- 원산지표시 이행율 : ('99) 94.8% → ('01) 95.9 → ('03) 96.1

○ GMO표시 지도·단속 : ('01) 87천개소 → ('03) 100

□ 안전성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소비자 기대치에 못 미침

○ 교육 시스템 부족 등으로 생산자 의식수준이 낮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

○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·장비 등이 부족하고 GAP 등 종합적인 유해물질 관리제도 정착 미흡

○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상의 유인책 부족

○ 소비자의 정책 참여 기회와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국내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 상존

2. 안전성 강화 대책

안전한 농식품 생산 기반 조성

- 생산자의 안전성 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성 교육 강화
 - '04년 신설한 생산자 리더층 대상의 안전성 교육 과정을 확대
 - 현장교육은 품목(업종)별·주산지별 선도농가 중심으로 실시
 - 안전성 교육이수를 각종 인증의 필수조건으로 규정
- 종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우수농산물관리제도 (GAP; Good Agricultural Practice) 조기 정착 추진
 - ('04) 시범사업 → ('05) 기준 및 지침 정비 → ('06) 본격 시행
 - 시범사업 : ('04) 350농가 → ('05) 700 → ('06) 품목별 희망농가 자율 참여
 - GAP 현장 지도·교육을 위한 지자체 GAP 전문인력 양성
 - '13년까지 시·군단위에 8~9명의 전문 관리 인력 배치 계획
 - 기준을 준수한 GAP농산물이 위생적으로 세척·포장될 수 있도록 산지 전처리(APC·RPC)시설·장비 보완

안전성 모니터링 등 감시 강화

-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강화하는 한편, 조사범위도 확대하여 근원적인 안전관리 기반 구축
 - 안전성 조사를 '03년 59천건 → '13까지 90천건으로 확대
 - 농산물·농약 중심의 안전성조사를 토양·용수·자재 등 재배환경, 신선 과일·채소류의 병원성미생물로 확대
 - 실태조사('04~'06) 후 관리기준 설정 및 개선 방안 마련

□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관련 시설·장비 확충

- 道단위 농관원 지원 분석실(9개)과 별도로 주요 시·군에 정밀분석실 38개 설치 추진('04 : 양평, 순천, 진주)

- 분석소요 기간을 현재 6~7일에서 2~3일로 단축

□ 안전기준 위반시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정책지원 불이익 조치 등 다양한 제재 수단 강구

- 위반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D/B화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다각적인 제재 추진

- 농협의 3진 아웃제,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와 연계

- 부적합품 생산 및 출하자에게 규격출하자금과 같은 정책자금 및 직불제 지원 차별화하는 등 불이익 조치

투명한 표시제 등 유통질서 확립

□ 원산지표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민간감시 기능 확대

- 사법경찰관리·중앙특별단속반 중심으로 과학적 접근으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

- 중앙특별단속반을 통해 전국적 규모의 부정업체 중점 단속

- 과학적 원산지 식별방법 개발 및 상습위반업체 List 작성·관리

- 실시간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분석, 조기경보시스템 운영

- 명예감시원의 증원 등 국민 감시 분위기 확산

- 명예감시원 대폭 증원 : ('03) 2,600명 → ('04) 2,800 → ('05) 3,000

- 부정유통신고자 포상금 확대

-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; (현행) 최고 100만원 → (개정) 200만원

☐ 생산·가공·유통·판매를 포괄하는 이력추적(Traceability) 시스템 도입

○ 이력추적 정부기준 및 근거법령 마련('04)

- 정부기준을 토대로 전산화 방안을 마련

○ GAP, 수출농산물 등에 우선도입 후 일반 농축산물로 확대('06)

안전 농산물 홍보·시장우대 방안

☐ 시장에서 가격우대 받도록 안전성 인증농산물(친환경인증, GAP)에 대한 홍보강화

○ 소비자 이동이 많은 대중교통수단 등을 통해 홍보 강화

- 지하철역사 및 시내버스 외면 홍보, LED 전광판 설치 등 추진

☐ 상장수수료 인하, 출하촉진자금 금리인하 또는 배정 확대 등 안전성 인증 농산물이 도매시장에서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

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

☐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장관자문기구인 “농식품안전자문단”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

○ 5.27일 회의에서 제기된 “안전성조사에 식중독균 포함 요청” 등 다수 의견 반영

☐ 소비자에 의한 시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 확대

○ 소비자 단체에 의한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지원

○ 농산물 인증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고, 현장체험 기회 확대

3. 하절기 특별대책 등 당면추진과제

□ 잔류농약 안전성 우려품목 집중 점검

- 고온다습한 하절기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콩나물, 고랭지 채소 등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실시(6.21 ~ 8.31)
 - 콩나물은 원산지와 GMO 표시를 동시에 점검
 - * 부적합율('03) : 전체 1.48%, 채소류 4.2%
- 시중 유통기한이 짧고 저장과정을 거치지 않는 채소류의 특성을 감안하여 생산과정에서 신속하게 분석 처리
- 부적합품은 출하연기·폐기 등 고지하고 생산농가를 특별관리
 - 고지사항 불이행시 고발 등 엄정한 법적용
 -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자는 D/B화하고 후작물 등을 수시로 재조사

□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

- 단속계획 : 학교 등 단체급식(6.10~30), 절임배추·김치 등 수입급증 품목(7월), 육류(8월) 등
- 단속반편성 : 검·경 합동 중앙특별단속반 및 대도시지역 원산지 전담반을 편성 운영(총 502명)

수입김치 원산지 특별 추적반 운영

- 최근 수입급증 품목인 김치에 대한 특별단속반 설치·운영
 - 주요 수입항인 부산·인천 및 주요 소비지역을 중심으로 단속
 - 통관단계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국내 유통경로 추적·단속실시
 - * 김치 수입량 : ('03.4까지) 2,477톤 → ('04.4월까지) 4,518톤(82% 증가)

□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

- 표시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'03.6월 대폭 강화하였으나, 위반사범에 대한 벌금액 증가율은 5%증가에 그치고 있음
 - 3년이하징역·3천만원이하벌금 → 5년이하징역·5천만원이하벌금
 - 위반사범 1건 평균 벌금액 : ('02) : 130만원 → ('03) : 137만원(5%증가)
-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을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검찰·법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

□ 농식품안전종합대책 추진 실태 일제 점검

- 3월에 각 기관 및 단체에 시달된 농식품안전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 추진상황을 일제 점검(6월중)
- 점검내용 : 세부추진계획 시행 상황, 시행 과정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, 미진한 과제의 원인조사 등
- 계획추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 추진

□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

- 원산지위반자 처벌 강화 방안 검토
 -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및 형량하한제, 위반회수에 따라 영업정지·취소가 가능하도록 행정벌 조항 신설 등
- 우수농산물관리제도(GAP) 및 이력추적제(Traceability)의 근거법 마련 추진
- 친환경, 우수농산물의 시장우대 방안 강구
 - 별도 코너 설치, 수수료 차별화, 출하선도금·장려금 우대 등

식 량 생 산 국

식량생산국

1. 현황 및 문제점

<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>

- '90년대 중반이후 친환경농업을 본격 추진하여 화학비료 투입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나 농약사용량은 큰 변화가 없음
 - 화학비료 : '99) 398kg/ha → '02) 342kg/ha ('99대비 △15%)
 - 농약 : '99) 12.2kg/ha → '02) 12.8kg/ha ('99대비 4.9% 증)
-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호 및 친환경직불제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 - 친환경인증농산물 : '03년 현재 366천톤(전체 농산물의 2%)
 - 친환경인증농가수 23천호, 재배면적 25천 ha

<폐광인근 오염 농경지 대책>

- 중금속 오염농경지는 작목전환, 휴경 및 토양개량대책 추진
 - 중금속오염농지 : ('00) 288.4ha → ('03) 73.0ha(대책기준 초과 21.9)
 - 작목전환면적('03) : 3.1ha, 휴경('03년) : 10.3ha, 객토('03년) : 2.2ha
- 오염농경지에서 생산된 쌀의 안전성 조사결과 카드뮴 잔류 허용기준(0.2ppm)이 초과된 쌀에 대해서는 소각·폐기 처리
 - 폐기 물량 : ('01년산) 41.7톤 → ('02년산) 30.1톤 → ('03년산) 7.0
 - * 산업자원부의 “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”은 예산부족으로 일부 광산만 지원 (폐광산 906개 중 오염 폐광산 127개, 지원대상 광산은 매년 10여개 수준)

2. 안전성 강화 대책

안전한 농식품 생산 기반 조성

□ '13년까지 화학비료·농약 사용량 40% 감축

- '04년부터 매년 5% 수준씩 감축

< 연차별 추진목표 >

◇ 합성농약 : 현재 12.4kg/ha(100) ⇒ '13년 7.4(60%)

구 분	현 재	2004	2005	2013
합성농약사용량절감 (성분량, kg/ha)	12.4 (100)	11.8 (95)	11.2 (90)	7.4 (60)
- 벼	5.0	4.9	4.5	3.0
- 채소류	7.1	6.8	6.4	4.3
- 과수류	20.3	18.8	17.3	12.0
- 기타	2.5	2.4	2.3	1.5

◇ 화학비료 : 현재 375kg/ha(100) ⇒ '13년 225(60%)

구 분	현재 (5년평균)	2004	2005	2013
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(성분량, kg/ha)	375 (100%)	337 (90)	320 (85)	225 (60)
- 벼				
└ 질소	154	112	105	92
└ 인산	65	44	42	40
└ 칼리	86	66	57	40
- 밭작물				
└ 질소	134	120	95	86
└ 인산	84	76	65	48
└ 칼리	85	75	61	46
- 원예작물				
└ 질소	303	280	268	241
└ 인산	149	134	126	90
└ 칼리	188	170	160	112

* 현재('99년~'03년 5개년간 평균)를 100%로 하여 '13년에 현재 대비 60%로 감축

< 화학비료 · 농약 사용량 감축 조치계획 >

- 유기질비료 차손보조 및 녹비작물 종자 보급을 지속 확대
- 시설원예작물을 대상으로 합성농약에 의한 방제를 천적방제로 대체하기 위해 천적 구입비 지원('05년 19억원)
- 친환경농업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교육의 획기적 확대
 - 친환경시범마을 사업 확대로 INM, IPM 교육훈련비 지원
 - 전체 농업인, 농약 생산 및 판매관리자에 대해 농약안전사용 교육실시
- 친환경농업대상을 제정, 우수 시·군, 농업인, 유통업체 시상
 - 매년 3억원씩 시상금으로 지급

□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 확대

-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, '05년에 모델개발을 거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'06년부터 본격 추진('05년 조사비 4억원)
- 친환경직불제 확대, 친환경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추진

□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토양환경 계측시스템을 조기에 구축

- 전국 농경지의 환경민감도에 따른 등급구분, 비료·농약 투입, 축분 배출 정도 및 환경위험 정도 등의 D/B 구축 및 지도작성
 - ARPC 기획과제에 반영, '05년부터 추진하여 '07년 완료(10억원)

□ 폐광인근 오염지(73ha)에 대해 휴경, 객토 등 관리 강화

- 대책기준초과(21.9ha) 농경지 대해 휴경, 작목전환, 객토 실시
- 우려기준(51.1ha) 농경지에 대해 작목전환, 객토, 토양개량제 살포
 - 카드뮴 대책기준 초과지역 폐광산에 대해 공해방지사업 우선 추진(산업자원부 협조)

안전성 모니터링 등 감시 강화

- 폐광인근 농경지에 대한 정밀 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
 - 폐광인근 농경지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결과에 따라 휴경, 작목전환 등의 대책을 추진
 - 폐광인근 중금속 오염우려지역 193필지의 중금속 잔류분석을 금년 9~10월 중 실시
 - 부적합 쌀은 폐기토록 지자체 및 농가에 통보

투명한 표시제 등 제도개선

-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(취급업자) 인증제 도입으로 유통 단계의 친환경인증농산물의 관리 강화
 -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
- 친환경인증농산물 시판품 조사 등 관리 강화
 - 반기별 1회 시판품 정기조사 및 명절 등 특별단속 지속 실시
 - 소비자단체와 합동 단속 및 분기별 1회 정기 조사 등 추진

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지원 및 홍보 강화

- 농협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 확대 설치 지원
 - '03) 125개 → '04) 170 → '05) 200
- TV-CF,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등 친환경농산물 우수 브랜드 홍보 지원 등 추진

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

□ 소비자 영농현장 확인·점검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

- 월 1-2회 정부와 소비자가 합동으로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농산물 생산현장을 직접 확인
- 현장에서 보완대책 수립 등 공동 협의

3. 하절기 특별대책 등 당면추진과제

□ 지난 4.29일 발표한 『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대책』을 착실히 추진하면서

- 금년말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으로 지방자치단체, 농업인,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 마련

□ 최근 광해(이따이이따이병) 관련 보도(6. 4일)로 문제가 된 경남 고성군 삼산광산 인근 농경지 대책 추진

- 환경부의 토양조사결과, 카드뮴 오염이 확인될 경우 농림부의 대책면적에 포함하여 작목전환, 토양개량 대책 추진
- 오염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실시 및 잔류허용 기준 초과시 폐기처리

축 산 국

축 산 국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축산물 위생·안전성 관리의 기본제도는 상당수준 정비

- 사육단계 : 동물약품(117종) 및 사료내 유해물질(78종) 설정 운용
 - 매년 농가교육 지속 실시 : '04 4개 권역별로 시행중(800명 계획)
- 도축·가공단계 :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도입 및 적용확대
 - 도축단계 식육에 대한 생체·해체검사 및 “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”에 따른 잔류물질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 실시(년간 100천건)
 - 소·돼지·닭 도축장(162개소)에 대해 '03.7.1부터 HACCP적용 의무화
 - '04.6월 현재 119개소 적용중, 2차에 걸친 시·도 교차점검을 통해 미적용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(1차 62개소, 2차 32개소)
 - * HACCP 적용이후 도체중의 일반세균수가 10^{5-6} 에서 10^{2-3} 수준으로 개선
 - 가공장은 자율적용 운영('04.6월 현재 136개 HACCP 운영업체로 지정)
- 유통단계 : 냉장 유통체계 정착 및 수거검사 실시
 - 수입축산물가공품 위생검사 실시(전체수입건수 20%: 연간 2,000~2,500건)

□ 과거에 비해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

- 사육단계에서 항생제 등 사용, 휴약기간 미준수 등 사례
 - (00)104천건(77건 0.08%)→(02)106(145건 0.14%)→(03)115(236건 0.20%)
 - * 위반율('00년):(미국) 0.46%, (일본)0.05%, (호주)0.21%
- 도축장 시설은 현대화되었으나 검사 내실화는 미흡
 - 포유류도축장 111개소에서 검사관 127명이 도축검사중(1.14명/개소)
 - * 일본은 포유류도축장 241개소에서 검사관 2,570명이 도축검사중(10.6명/개소)
- 유통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미흡하여 재오염 사례가 다수 발생

2. 안전관리 강화대책

사육단계

□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
○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설정

- 항생제, 합성항균제

- 소 :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(10일), 카바독스 (70일)
- 돼 지 :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(10일), 티아무린(7일), 페니실린(14일)
- 닭 : 린코마이신(3일), 설파디메톡신(14일), 옥시테트라사이클린(7일)

- 후기사료 급여 기준

- 소젖소 (종모우임산우), 돼지 (비육돈 출하 15일전), 육계 (출하 7-10일전)

○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전국순회교육(년 2회이상, 4개 권역)

- 잔류방지 교육·홍보 예산증액

- ('04) 36백만원 → ('05)300백만원('05예산 추가요구필요)

- * 교육 내용 : 동물 약품별 안전사용기준, 후기사료 급여의 당위성, 내성균 출현 문제, 잔류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

□ 동물약품(항생제) 안전관리 및 잔류방지

○ 배합사료 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약품 종류 감축

- 종 류 : (현행) 항생제, 합성항균제 등 53종 → (감축) 30종 이하

- 감축기준 : 내성이 강한 항생제, 잔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항생제 등

- * 사료내 혼입가능한 동물의약품 : EU 4종, 일본 23종

○ 농가의 동물약품 임의 혼합 배제 조치 강구

- 장기적으로 수의사 처방에 따른 동물약품 혼합 및 안전사용기준 준수

□ 사료공장 HACCP 도입

- 사료내 항생제, 아플라톡신, 농약, 중금속, 살모넬라 등 위해요소규제
- 작업반 (T/F) 구성 · 운영, 10월중 도입계획수립 완료

□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항생제 사용량 축소

- 축사 소독, 청소 지도, 밀사방지 등을 통한 질병 발생 감소 유도
- 생산자 단체 주관으로 교육·홍보 ('05예산 추가요구 필요)
- 교육비 200 백만원 (50 백만원 X 4개 단체)

□ 농장 HACCP제도 도입 추진(비육우, 젖소, 돼지, 산란계, 육계)

-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추진 ('05), 적용지침 마련(06), 시범사업('07)

□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가에 대한 규제 강화

- 규제 검사기간 연장 : (현행) 3개월 → (연장) 6개월
-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(100만원)부과철회 등 제재 강화
- 규제검사대상농가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
 - 1농가 1공무원 담당관 제도 운영
 - 잔류위반농가 명단, 사육규모, 출하 예정일별 두수를 전산화
 - 잔류위반농가 검역원 홈페이지 게재

□ 동물약품 안전 사용농가에 대한 우대조치

- 브랜드 정책자금 지원 및 인정시 잔류위반비율을 반영

도축 · 가공 단계

□ 도축검사강화

- 소·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에 검사관 증원 배치
 - 년차별로 도축검사관을 늘리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 협의
- 도축 공정 라인별 해체 검사 보조원 배치
 - 05년도에 100명 확보를 위한 예산 요구중(기획예산처)

□ 식육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강화

-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물량확대 : ('04)102천건 → ('05)120천건
 - 주사자국, 화농부위,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농가 출하가축에 대해 중점검사
- 식육중 미생물 검사물량 확대 : ('04) 92천건 → ('05) 120천건
 - 검사대상 : 대장균 (도축장 영업자), 살모넬라균 (시도)
 - 허용기준(대장균) : 소(100개/ml), 돼지(10,000개/ml), 닭(1,000개/ml)
 - 허용기준치 초과 작업장 : 시정조치, HACCP운용내용 재평가, 행정처분

□ 도축장 HACCP 운영 수준 평가 실시, 인센티브 제공

- 평가결과 우수 도축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을 우대 지원하여 위생수준 제고 등 경쟁유발 촉진
- 평가결과 상위업체는 0% 금리, 중위업체는 3%, 하위업체는 자금지원 배제 ('05 예산요구 : 578억원)

□ HACCP 적용 축산물 차별화 추진

- 105개 기관(각부처, 정부투자기관, 지자체, 군납, 학교급식, 대형유통업체, 백화점 등)에 HACCP적용 하여 HACCP 적용 축산물 우선구매 협조요청 (5.24)
- 그 결과, HACCP운용도축장, 가공장 제품사용 분위기 확산
- 지속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협조요청 추진
- 축산물가공처리법에 HACCP인증을 받은 도축장, 가공장만 HACCP 명칭을 사용토록 조치
 - 미적용작업장의 불법 명칭 사용 계도 및 단속강화 (04.1.29일부터 계도, 7.30이후 단속)

□ 도축장내에 육가공장 설치 확대 · 2차 오염 최소화

-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도축장내 육가공장 설치확대
 - (현재) 30% (LPC는 85%) → ('13) 70%
- 브랜드 인증 및 정책자금 지원,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 도입시 우대
 - 육가공장 설치비율을 유통업체, 대 소비자 등에게 홍보

유통 · 소비단계

□ 축산물 유통(보관 · 판매 · 집유)단계 HACCP도입

- 유통단계의 HACCP운용 계획 작성 지침 작성 (12월)
- 보관 · 판매 · 집유 업소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개발('05)

□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(Traceability) 도입 추진

-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전면 도입을 위한 추적시스템 사전구축
- 금년 10월부터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
-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·평가하여 법령제정 등 전면 실시에 대비한 제도를 사전에 완비('08까지)

□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추진

- 식품위생법 중 개정 법률안 국회에 제출 ('04.6.1 이인기 의원 등 10명 발의)
- 단속실효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중
 -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식육거래 내역서 원산지표시 의무화

□ 소비자 단체와 협력 강화

- 축산물 위생 명예감시원 활용강화(소비자단체, 생산자 단체 적극 참여)
 - 실질적 감시가 되도록 명예감시원의 인원 증원 및 감시수당 인상조정
 - 인원 : ('04) 1,000명 → ('05) 2,000명
 - * '03년도 실적 : 988명 위축 활용 (150백만원중 40백만원 집행)
 - 수당 : ('04) 3만원/1일 → ('05) 5만원('05예산 추가요구 필요)
- 축산물 위생·안전 관리 정책추진에 소비자 단체 참여확대
 -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(분과위)에 소비자단체 임원 참여 확대
 - 축산물위생·안전성 연구사업 공동 수행 및 캠페인 전개유도 등
 - 생산자, 수의관계 공무원 교육시 소비자단체 임직원 강사 활용

3.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상태 등 지도·단속실시

□ 도축장 HACCP운용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

- HACCP 미적용 도축장 및 기적용 도축장의 HACCP운용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
 - 1차 점검(04.1월) : 32개 도축장에 대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 15일 등)
 - 2차 점검 중 (04.5~6월) : 도축장 HACCP 운용실태
-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·도간 교차점검 실시('04.7월중)
 - HACCP 미운용 도축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

□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 지도·단속실시(검역원)

- 1차 점검실시(04.4.19~5.20)
 - 391개소 점검결과 45개소 적발(관할 시도에 행정조치 통보)
 - * 적발내용 : 영업자 준수사항 (종업원 위생문제, 시설위생 등)
- 2차 점검 실시중 (04.6.1~7.14)
 - 둔갑 가공·납품 행위 여부 등
 - 위생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언론 등에 공포

□ 하절기 닭고기 위생관리 및 특별단속실시(04.6.1~8.15)

- 도축장·가공장·판매장을 대상으로 원료 관리 등 위생 상태 점검

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

농산물품질관리원

1. 추진실적

□ 유해물질이 주로 오염되는 농장(생산)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적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

- 총 조사건수 : ('03) 59,570건 → ('04. 5) 16,561건(계획:60,000건)
- 부적합 : ('03) 880건 → ('04. 5) 168건(폐기28, 출하연기 등 140)
 - 부적합비율 : ('01) 1.15% → ('02) 1.07 → ('03) 1.48 → ('04. 5) 1.0

□ 친환경 인증 농산물 사후관리 강화

- 잔류농약 검출, 표시위반 등에 의한 행정처분 실적
 - ('03) 187건(고발 12, 인증취소 등 175) → ('04. 5) 17건(인증취소 등 17건)

□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및 민원검정 서비스 확대

- ('03) 3,506건(부적합 151) → ('04. 5) 910건(부적합 22)
 - ※ 부적합품은 전량 수출 보류 조치
- 농산물, 토양 등 민원검정 서비스 확대로 농업인 편의 제공
 - ('03) 7,869건 → ('04. 5) 4,072건(전년 대비 51.7% 수준)

□ 안전성조사 인식제고 및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참여 확대

- 농·소·정 협의회 개최 : ('03) 14회/179명 → ('04. 5) 3/40
-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조사 : ('03) 4,343건 → ('04. 5) 136건
- 부정유통 신고 전용전화 운영 활성화 및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예산 확대 : ('03) 127백만원 → ('04) 147

□ 농산물 원산지 및 GMO 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

- 원산지 : ('03) 6,327개소 → ('04.4) 3,048(허위 1,787)
 - 기획단속 : 선물·제수용품(1월), 절화(5월), 홈쇼핑·인터넷(4·5월)
- GMO : ('01) 4,716점/44점검출 → ('03) 21,131/ 12 → ('04.5) 5,050/ 2

2. 하절기 특별대책 등 당면 추진과제

〈하절기 특별대책〉

□ 농산물중 부적합 비율이 높고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품목
불시 집중 안전성 조사

○ 중점관리(30품목) : 채소류 26종, 과실류 2종, 버섯 2종

□ 여름철 농약사용이 우려되는 콩나물 특별조사

○ 하절기 부패방지를 위해 농약사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점을
감안, 생산 환경이 취약한 업체를 중점 조사하여 부적합품은
폐기 및 고발 조치

□ 여름철 고랭지 채소, 가을철 과실류 및 김장채소류 등에
대한 일제 안전성 조사

○ 주산단지를 조사하여 부적합품 시중출하를 사전에 차단하고,
주요 부적합 품목 및 생산지역 등을 공개

□ 원산지 특별 기획단속 추진

○ 단속계획 : 단체급식(실시중), 육류(7월), 추석대비(9월) 등
○ 국민 다소비식품이나 상습위반사범은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
단속·수사

〈당면 추진과제〉

□ 휴·폐광산 카드뮴(Cd) 오염우려지역 생산 쌀 안전성조사

○ 환경부로부터 토양오염우려지역으로 통보 받은 193필지에서
생산된 쌀에 대한 카드뮴 조사

- 잔류허용기준(0.2ppm)을 초과한 부적합품은 전량 폐기토록 지자체
통보 및 농가 고지

□ 논농업직접지불제 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

- 친환경적 영농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논농업직불제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조사(4,500건)

□ 우수농산물관리제도(GAP) 참여농가 관리 및 안전성 조사

- 시범사업 350농가의 재배토양, 용수, 생산물의 위해요소 차단 관리

□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안전성 조사

- 3~4월 시범사업에 이어 주 수확기에 잔류농약 조사(총 400건)

3. 제도개선 추진계획

□ 생산단계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시험 및 기준(안) 마련

- 생산단계 농산물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시험(실시 중)
 - 대상 : 들깨잎, 배추, 부추, 사과, 상추 등 11품목 24성분
 - 연구기관 : 12개소(농관원 8개소, 서울대 등 4개 대학)
- 재배토양·농업용수·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실태조사
 - 조사계획 : 토양 100점, 용수 50점, 농업자재 50점
- 생식채소류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오염실태 조사(150건)

□ GMO 분석능력 제고 및 검정기술 연구·개발

- 새로 개발·유통되는 GMO의 정량 분석법 개발 및 분석능력 제고

수 의 과 학 검 역 원

수의과학검역원

1. 추진실적

□ 축산물작업장의 HACCP적용추진

○ 도축장 HACCP 적용 추진

구 분	의무적용대상	추진실적			
		'00~'02년	'03년	'04년 5월	계
개소	162	56	50	13	119

※ HACCP도축장 도축비율('03) : 소90%, 돼지96%, 닭92%

○ 축산물가공장 HACCP 적용 추진

- 136개소('04. 6) : 식육가공장104, 유가공장32

□ 정기적·주기적 축산물 위생감시 지도·단속 실시

○ 축산물 처리 업체 위생지도점검

2003년		2004년 4월	
위생지도점검	위반업소	위생지도점검	위반업소
2,536	154	1,003	50

○ 유통 중 축산물 수거검사

2003년		2004년 4월	
수거검사	불합격	수거검사	불합격
845	6	143	0

※ 수거검사 부적합율 : ('99)2.7% → ('01)1.3% → ('03)0.7%

□ 설·하절기 등 축산물 특별 위생감시 지도·단속

- 설 대비 특별단속(1.10~20): 273개소(위반 11개소)
- 학교급식 납품업체 특별단속(4~5월): 391개소 (위반 45개소)
- 하절기 닭고기 특별기획 단속(6. 1~6.12) : 16개소 (위반 4개소)
※ 주요위반사항 :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·판매, 허위표시 등

□ 수입 및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관리

- 미국, 일본 등 선진외국에 비해 높은 수입축산물 정밀검사
- '04.1/4분기 : 총수입건수 7,617건, 정밀검사 1,072(14.1%), 부적합 30건(2.8%)
※ 전체 수입의 약 10~15% 정밀검사 (일본, 미국 등 2~3% 검사)
- 국내 축산물 유해물질 잔류검사 및 잔류위반농가 공개 관리
- '04.1/4분기 : 총 80종 26,788건 검사, 위반 96건(0.36%)
※ 농가의 동물약품 잔류 방지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설정·사용규제 (항생제 등 61종의 휴약기간 등 사용기준 설정)

□ 축산물 위생관리규정 개정 및 과학적 위생감시 기법도입

- 축산물 가공기준·성분규격 개정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
- 미생물 검사 기트 등을 통한 과학적 축산물 위생감시

□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연구

- 유전학적 기법을 이용한 살모넬라균 등 내성분석·실태파악
-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독성평가 및 안전사용기준 등 설정

□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비자·업계 등과 공동노력

- 소비자, 전문가 참여 자문위원회/간담회 : 3회, 33명
- 도축업, 가공업, 보관업, 운반업 등 업종별 간담회 : 4회, 70명

2. 당면 추진과제

□ 하절기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단속 및 안전성 검사(계속)

- 학교, 병원, 호텔 등 단체급식소 납품업체 단속 (243개소)
- 유통단계 축산물 수거검사(계속) : 5,880건 (검역원 700건)
- 수입·국내 축산물 잔류물질·미생물 검사 (계속)

□ 축산물 위생관리 소비자 및 업계 교육·홍보

- 소비자 위생 교육용 홍보 팜플렛 제작·배포
-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전화 홍보물 제작·배포 추진
- 보관·운반·판매업의 표준위생관리기준(SSOP)적용 홍보

□ 축산물 위생감시과 및 축산물안전성 센터 신설 추진

- 위생감시과 : 국내·수입산 유통축산물 중앙감시체계 강화
- 안전성센터 : 축산물 안전관련 집중 연구·평가기능 강화

□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

- 유해물질 독성평가·고감도 잔류분석기술 개발 등 8과제
- 방사선조사 축산물 검지기법 및 유해미생물 연구 등 5과제

□ 축산 식품내 항생제 잔류 및 내성균 연구 추진

- “축산용 항생제 관리시스템 구축” 연구 (식약청 공동과제)

□ 동물 또는 축산식품 유래 질병 방제 연구

- BSE, 출혈성대장균(O157:H7) 등의 진단·예방법 개발

농 촌 진 흥 청

농촌진흥청

1.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안전성 확보기술, 생산자 인식, 안전생산 분위기 조성 미흡
- 화학 농자재에 비하여 생물농약 등 친환경 자재 개발 저조
- 농약잔류 등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상존

나. 추진 현황

□ 농경지·농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 조사

- 취약농경지의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기술 개발
 - 농경지 중금속 모니터링 4년 주기 조사
 - 광산인근('04)→공단인근('05)→생활하수('06)→고속도로주변('07)
 - 농경지 오염물질에 대한 원인분석 및 환경오염 관리기술 개발
- 농산물중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
 - 농산물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4년 주기 조사
 - 엽채류('04) → 과채류('05) → 과실류('06) → 곡류('07)
 - 저장유통중 부패변질 농산물의 미생물 독소관리기준 설정 연구

□ 농약안전사용 및 친환경농자재 활용

- 우수 안전농약 등록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확대
 - 등록농약 안전사용기준 설정 확대 : ('03)649 → ('04)708품목
 - 소면적재배작물의 농약등록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: 34작물 72품목

○ 농약 사용 절감기술 개발 및 보급

- 병해충종합관리(IPM)기술 시범 : 벼, 사과 등 302개소 2,987ha
- 천적·페로몬이용 생물적 방제기술 개발보급 확대 : 201개소 924ha

○ 친환경 농자재의 표준사용법 작성 활용

- 병해충방제, 토양개량, 작물생육용 자재 : 목초액, 맥반석 등 84종

□ 우수농산물관리제도(GAP) 도입 기반 구축

○ 기술대책반 구성 : 작물, 원예, 축산 등 11개반

○ 작물별 표준재배 지침서 작성 : ('03) 67 작목 → ('04) 82작목

- 소면적 재배작물 추가 : 쌈채류, 오미자, 산수유 등 15작목
- 농약사용, 토양관리, 용수수질기준 준수 등 재배지침 보완

○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생산이력관리체계 구축

- 생산이력관리시스템 시범운영 : 엽채류, 과채류 등 3개 영농법인
- 한우사육 및 방역관리 전자칩 내장 추적정보체계 개발
 - 농가, 도축장, 가공공장, 백화점 연결 무선인식시스템 시범운영

○ GAP 시범농가 및 농업현장 지도요원에 대한 교육·홍보

- 표준재배지침서에 의한 농가 및 품질관리사 교육 지원 : 350농가
-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시범사업 추진 : 18개소

2. 유전자변형농산물(GMO) 환경위해성 심사·평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'03. 9 발효됨으로서 우리나라도 연내 비준계획임
 - 미심사 품목은 법 발효 90일 이후에는 경과, 유예과정 없이 수입금지
 - 가공용 수입 콩의 약 81%, 사료용 수입옥수수 25%가 GMO로 추정
- GMO에 대한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 연구기반이 미약

□ GMO 심사체계

- GMO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(농림부 고시 제2002-2호, '02. 1. 9)
 - 적용범위 : 재배용·식용·사료용 수입 및 국내생산 GM농산물
 - 심사절차 : 전문가심사위원회(15명) → 필요시 평가기관에서 포장시험
- GMO환경위해성 심사시 검토사항
 - 개발목적 및 타당성, 도입유전자 정보, 잡초화 가능성, 생태계 영향 등

□ 수입 GMO 심사현황

- 심사의뢰 품목 : 제초제·해충저항성 작물 11품목(콩 1, 옥수수 6, 면화 4)
- 심사승인 내역 : 2품목
 - 제초제저항성 콩 40-3-2(3. 9), 해충저항성 옥수수 MON810(6. 4)
 - ※ 현재 심사중인 옥수수, 면화의 9품목은 11월까지 완료 예정

□ GMO 평가기관 지정운영 및 연구 강화

- 평가기관 지정 : GMO 격리온실·포장 등을 확보한 기관
 - 유전자분석(생공원), GM작물의 농업적특성(작물원, 고농연)
- 평가기술 개발 확대 : GMO안전성과 신설 및 연구단 구성 운영
 - 제초제저항성 벼·고추·들깨, 바이러스저항성 감자 등 4작물

< 참고자료 >

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수행과제 : 51

□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: 21과제

과 제 명	연구기간	수행기관
○ 농업환경변동 조사사업	1999~	농과원
○ 농경지의 작물양분 종합관리(INM) 기술체계 확립	1999~	농과원
○ 농업환경 오염평가 및 제어대책 연구	2001~	농과원
○ 환경친화형 시비관리 기술연구	2004~	농과원
○ 농산물 중 유해물질 관리기반 구축 연구	2004~	농과원
○ 유기농법 실용기술 체계화 연구	2004~	농과원
○ 선진유기농업기술 실용화 연구	2004~	농과원
○ 유기농자재 효과검정 및 이용 기술개발	2004~	농과원
○ 왕우렁이 생태 및 방제체계 연구	2004~	농과원
○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 비옥도 관리 모델 개발	2004~	농과원
○ 고령지권역 친환경 농업을위한 시비기술 개발	2003~	고농연
○ 주요 원예작물의 종합 양분관리기술 개발	2003~	원예연
○ 벼 시비량 절감을 위한 생리생태연구	2004~	작물원
○ 천적의 이용기술 개발	1999~	농과원
○ 곤충 페로몬 이용기술 연구	2003~	농과원
○ 곤충병원미생물을 이용한 해충 방제 연구	2002~	농과원
○ 채소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개발	2003~	농과원
○ 배 친환경 고품질 생산 과원 종합관리 체계 확립	2002~	원예연
○ 농약의 품질관리 및 분석법 개발 연구	1998~	농과원
○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기술체계 확립	2004~	농과원
○ 소면적 및 수출유망작물 농약직권등록 시험	2004~	연구개발국

□ 우수농산물관리제도(GAP)도입을 위한 기반연구 : 7과제

과 제 명	연구기간	수행기관
○ 친환경 안전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 기술개발	2002~	작물원
○ 농산물 안전성제고를 위한 이력정보체계 연구	2003~	농업경영
○ 국내재배 10대 약용작물 안전생산 재배기준(GAP) 설정연구	2003~	작물원
○ 채소작물의 GAP재배 지침서작성	2004~	원예연
○ 안전 농산물 생산 지침 설정 연구	2004~	농과원
○ 안전농산물의 생산체계연구	2004~	농과원
○ 농산물 생산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	2004~	농업경영

□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수확후 관리기술개발 연구 : 15과제

과 제 명	연구기간	수행기관
○ 쌀의 품질관리 및 평가연구	2004~	작물원
○ 벼 수확후 관리 연구	2004~	작물원
○ 맥류 수확후 관리실태 및 품질특성 연구	2004~	작물원
○ 식용옥수수 품질유지 및 부가가치 향상연구	2004~	작물원
○ 원예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	2001~	원예연
○ 원예산물 저장 및 유통중 부패미생물 억제 기술개발	2004~	원예연
○ Fresh-cut 과실, 채소의 상품성향상 기술 개발	2004~	원예연
○ 수출과채류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환경개선 연구	2003~	원예연
○ 저장농산물의 병해충 조사 및 대책 연구	2004~	농과원
○ 원예산물의 산지처리기술에 관한 연구	2002~	농공연
○ 신선채소 세척 냉각 살균시스템 개발	2004~	농공연
○ 농산물 저장 및 저온유통 기계 시설에 관한 연구	2002~	농공연
○ 농축산물 안정성 진단용 바이오센서 개발	2003~	농공연
○ 축산물의 가공 저장 및 평가에 관한 연구	2002~	축산연
○ 농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판정기술 개발	2002~	농공연

□ GMO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술개발 : 8과제

과 제 명	연구기간	수행기관
○ 제초제저항성 고추 유전자이동성 연구	2003~	생공원
○ 유전자변형작물의 신생독성물질평가 연구	2003~	생공원
○ 유전자변형작물(GMO)의 환경안전성 평가	2003~	생공원
○ 제초제 저항성 벼의 환경위해성 평가연구	2004~	생공원
○ 유전자변형작물 영양성분 변화평가 연구	2003~	농과원
○ 제초제저항성 들깨 유전자이동성 연구	2003~	작물원
○ 유전변형작물의 알레르기 유발가능성 평가 연구	2003~	한식연
○ GMO 검정기술체계 확립	2004~	경희대

산 림 청

산 립 청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임산물은 대부분 청정·무농약 상태로 생산되나 일부 유실수, 재배 산채류의 경우 농약을 사용

- 표고·송이 등 버섯류와 채취 산채류 등은 청정임산물로 생산
- 밤·대추 등의 경우 병충해 방제를 위해 대부분 농약을 사용
- 취나물·참나물 등 재배 산채류도 제초제 등 농약을 사용

2. 안전성 강화 대책

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

□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지원 확대

- 친환경임산물 생산자에게 정책자금 등 우선 지원
-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, 성페르몬시설 등 지원
- 지력회복을 위한 친환경 토양개량 추진
 - 유기질비료·목탄·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로 토양개량

□ 친환경생산이력제 추진

- 임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 등 단계별 과정 공개
 - 생산지, 생산자, 농약·비료사용 등 표시
- 생산자·산림조합을 중심으로 「임산물 리콜제」 추진

안전성 강화 등 유통질서 확립

- ☐ 「임산물품질인증제」 품목에 밤·표고·산채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추가
- ☐ 원산지 표시 및 불량 임산물 지도·단속 강화

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

- ☐ 지역특산품 및 생산자별 고유브랜드화 추진
 - 부여 「다람쥐밤」, 공주 「정안밤」, 문경 「청정 문경새재표고」, 경산 「김영표 버섯명가」 등
- ☐ 청정·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
 - 신문, 방송, 인터넷 등을 통해 청정 브랜드 임산물 홍보
 - 밤·버섯·수액 등 지역별 청정임산물 축제 등 행사 지원

3. 하절기 특별대책 등 당면추진과제

- ☐ 원산지 표시 및 불량 임산물 지도·단속
- ☐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현황 파악

농 협 중 앙 회

농 협 중 앙 회

1. 현황 및 실적

□ 농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조직 확대

- 농업경제기획실 내에 「식품안전관리국」 설치
- 농협식품연구소의 기능 및 조직 확대

□ 잔류농약 간이속성검사 강화

- 산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속성검사 확대
 - 검사실적 : ('01) 97천건 → ('02) 96 → ('03) 116

□ 인삼 생산이력제 도입

- 인삼계열화사업 참여 경작자 생산이력카드 기록 의무화
 - 인삼계열화 사업규모 : ('04.5) 120억원, 500ha

□ 토양검정 사업실시

-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시비 및 우수농산물생산 유도
 - 분석실적 : ('01) 95천점 → ('02) 299 → ('03) 560

□ 축산사업장에 대한 HACCP 인증 지원

- 도축, 가공시설에 대한 HACCP 인증 추진
 - '03년 인증실적 : 도축장(12개소), 육가공장(19), 유가공장(4)

□ 권역별 「식품안전센터」 설치·운영

- 신속한 정밀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차단
 - ('03) 수도권(서울), 중부권(대전), 영남권(군위) 설치 완료
 - 검사실적 : ('03) 2,726건 → ('04) 5,000 계획
 - 3진아웃 실적 : 1개월정지(294건), 3개월(12), 퇴출(3)
 - * 3진아웃제 : 1차적발(1개월정지), 2차(3개월정지), 3차(퇴출)

□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설치

- 농협농식품의 원산지표시위반, 유통기한경과 등 신고
 - 신고건수 : ('04.6) 16건, 농산물상품권(5만원) 지급

2. 향후 대책

산지 안전성 관리 강화

□ 산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활성화

- 「산지안전성검사 시범사업」 실시
 -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업무협약 체결('04. 6. 11)
 - 농협 자체검사필증 부착 농산물 우선출하

□ 산지조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

- 출하 농산물에 대한 간이속성검사비 신규지원
- 산지조합에 잔류농약 정밀검사비 일부(50%) 지원
 - ('03) 3백만원 → ('04) 20백만원

□ 「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특별대책반」 운영

- 중점관리품목 및 생산지에 대한 지속적 특별관리 실시
 - 시군지부 유통전문역을 중심으로 추진
 - 출하농가의 검출농약사용 여부 조사 및 경위서 징구

□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안전성 교육 강화

- 조합원 마인드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 확대
 - 농약안전사용기준, 품질경영관리, GAP 등(7~8월, 1,000명)

□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지도 확대

- 농장단계의 HACCP 추진 및 출하 전 휴약기간 준수 지도
 - 전국 순회교육 확대(800명), 수의사 기술교육(50명)

□ 부정농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

- 조합과 직원에 대하여 자금지원 제한 및 처벌 강화

소비자 농식품 안전성관리 강화

□ 「우리농산물지킴이」 신설 운영

- 농협판매장에 대한 원산지, 유통기한경과 등 농식품 안전성 상시점검
 - 고향주부모임,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위촉 운영 (121명)

「우리농산물지킴이」 발대식

- 일시 : '04. 6. 15 / 11:00 ~ 12:00
- 장소 : 농협유통 양재점
- 참석대상 : 농림부, 농협중앙회장, 소비자단체장 등 300명
- 주요내용 : 지킴이 발대식, 안전농식품 공급결의문 채택,
농산물수집판매차량 전달식 등

□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지도 강화

- '쓰레기 만두소' 와 관련하여 전 계통사업장에 문서 지도
- 부정불량식품 취급 근절 및 원산지표시제 준수 등 ('04.6.9)

□ 하절기 및 설, 추석 농식품 안전성점검 강화

- 월별, 시기별 중점관리품목 지정 등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
- 고춧가루, 가공식품, 양념채소, 전식 등 (7~12월)

□ 잔류농약분석 정밀기기 확대 설치

- 전국 3곳의 식품안전센터를 호남권에 추가 설치
- ('03) 수도권, 중부권, 영남권 → ('05) 호남권 추가
- 11개 농협유통센터 농산물 반출입시 정밀검사 확대
- 정밀검사가기 : ('04) 3대 → ('05) 6

□ 원산지 및 품질안전관리 교육 확대

- 지역본부, 시군지부 단위 전국 순회교육 강화
- 시군지부 유통전문역(156명) 교육 실시 (6.15)
- 농협연수원 정기교육 확대
- 농협구미교육원(조합직원 120명) 품질관리교육 실시(7월)